

행정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④	④	③	②	④	④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②	①	③	①	③	③	④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5	재무이론	3
정책이론	3	행정환류	-
조직이론	2	전자정부론	-
인사이론	5	지방자치론	2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7	생소한 문제	3	100점 방지	0
------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0점 이상
분발대상: 75점 이하

매번 출제되던 지방직 9급 난이도와 패턴대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합격할 준비가 된 수험생은 90점 이상은 가볍게 득점할 수 있었던 문제구성입니다. 그동안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오고 기출문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15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이고, 기존 기출문제에서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가 2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점수는 85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도 풀 수 없게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문제 이상 맞춰줬다면 고득점이 완성됩니다.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서 원체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기출해설 강의에서 많이 흥분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시원찮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의 우선순위와 복습의 중요성을 꼭 느끼셔야 합니다. 행정학 고득점은 매번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혼동됨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강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에서 다 다루는 문제인데 그동안 복습을 통한 반복이 잘 되어 있어야 현실에서 구현되었을 겁니다.

이 작업이 잘 된 이후에 생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모의고사와 기본서를 활용하여 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의 생소한 문제 중 이론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내용은 대비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였으나, 행정학을 떠나 사회적으로 가장 유명한 내용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부족한 개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메꿔서 다음 시험 점수 폭발의 기초로 삼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 문 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암기용 해설>

-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 ▶ 탈규제: 신공공관리론
-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 ▶ 민주성: 뉴거버넌스론
-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 ▶ 대응성: 신공공관리론(효율성은 출제의도에 따라 다름)

<이해용 해설>

- ① (○) 19C 미국 고전적 행정학의 기초가 되었던 정치행정이론,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전통적 관료제론 등은 절약과 능률성을 추구하였다.
- ② (X) 신행정론은 1960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과 실천, 사회적 형평성 등을 추구하였다. 탈규제는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가치이다.
- ③ (X), ④ (X)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의 원리를 통한 효율성과 고객대응성을 강조하였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독점적인 전통적 관료제 방식보다 다양한 참여자가 협력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론으로, 신공공관리론보다 시민 참여를 중시하며 민주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문 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암기용 해설>

-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 ▶ 대리인 문제 해결: 재량권 축소

<이해용 해설>

- ① (○) 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에 대한 결정론으로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② (○) 전략적 선택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으로 상황이 조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③ (○)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으로 조직은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④ (X)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인의 재량권 축소를 주장한다.

문 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④ 효율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 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암기용 해설>

-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 합리적 개인 가정의 비현실성

<이해용 해설>

- ② (○) 공공선택이론은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대응성 혹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행정이 민주행정이라고 본다.
④ (X) 공공선택론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기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품목별예산제도

<암기용 해설>

- ③ 영기준예산제도: 총체주의, 분권적·참여적 예산

<이해용 해설>

- ③ 전통적 예산제도 중에 총체주의적 방식을 취하면서 조기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권화된 방식을 취하는 예산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도 밖에 없다. 총체주의적인 예산제도는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암기용 해설>

-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하향식(Top-down) 방식(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부처의 지출한도를 결정)

<이해용 해설>

- ① (○), ③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정해진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② (X)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에서는 지출한도를 각 중앙관서(부처)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관서(부처)에 하향식으로 배분한다.
④ (○) 우리나라의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운영은 제도의 취지대로 부처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문 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경제적 기능: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

<이해용 해설>

- ① (○) 예산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은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이 다.
② (○) 세입 면에서는 차별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③ (○) 예산사용으로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중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이 다.
④ (X)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만을 말한다.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하는 기능은 슈ick(Schick)의 행정관리적 기능 중 통제 기능이다.

문 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제처 - 국무총리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암기용 해설>

-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이해용 해설>

- ④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이다.

문 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 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암기용 해설>

- ② 이익집단 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대중 정치

<이해용 해설>

- ② (X)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집단이 없는 대중 정치의 예시이다.

<이해용 해설>

- ④ (X)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스(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암기용 해설>

-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처리의 연속성 유지 가능
-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 반영이 불리
- ④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스(Allison) 모형의 Model I 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 ▶ 엘리스(Allison) 모형의 Model II (조직과정모형):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가정

<이해용 해설>

- ① (X) 공식적으로 정해진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O)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운영절차를 따르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③ (X) 표준운영절차에만 따르면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하고 예외적인 문제를 반영하기에는 불리해진다.
- ④ (X) 정책결정모형 중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모형은 엘리스 모형의 Model II (조직과정모형)이다.

문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암기용 해설>

-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 고위직 관료: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형성을 통한 사익 추구
-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 중하위직 관료: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
- ▶ 고위직 관료: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
-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 ▶ 관청형성모형: 관료도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우선시

<이해용 해설>

- ① (O)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합리적인 관료들은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회피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청형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 ② (X) 합리적인 관료들이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모형은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이다.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이를 비판하는 모형으로,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을 형성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주장한다.
- ③ (X) 관청형성모형은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고, 고위직 관료는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고 본다. 물론 둘 다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형성을 추구한다.
- ④ (X) 관청형성모형은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적용하는 모형으로 관료 또한 공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문 16.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암기용 해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 피규제자의 자율성: 네거티브 규제 > 포지티브 규제

<이해용 해설>

- ② (O) 경제규제는 시장경쟁과 관련된 규제로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사회규제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X)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규제방식이며,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따라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은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 높다.
- ④ (O) 직접규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정부가 규제권한을 민간집단에 위임하고 그 민간집단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공동규제 방식도 있다.

문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③ 자치경찰공무원
- ④ 지방소방공무원

<암기용 해설>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 ▶ 별정직 공무원

<이해용 해설>

- ① (X)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 ② (O), ③ (O), ④ (O)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